

40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그리고 남영동

오수성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심리건강연구소 소장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그리고 남영동

오수성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심리건강연구소 소장

01

역사의 올바른 해법

한국의 근현대사는 식민지 지배, 전쟁, 분단 그리고 독재라는 뼈아픈 상처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 번의 시도조차 실패로 끝났다. 지난날의 과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실수는 바로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은폐 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에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과거란 덮어 버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청산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는 과거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를 매개로 하여 과거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잘못된 과거가 만들어 놓은 뒤틀린 매듭을 올바르게 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려고 해도 매듭은 더욱 꼬이게 마련이다.

역사의 경험을 다루는 데는 기억의 해법과 망각의 해법이 있다. 기억의 해법은 그 사건을 촉발시킨 상황과 그 정신을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망각의 해법은 과거는 단지 과거지사이므로 잊어버리고 미래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망각의 해법이 아니라 기억의 해법이어야 한다.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여 교훈을 얻는 능력에 달려 있다. 망각의 해법이 아닌 기억의 해법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경험에서 참된 교훈을 얻을 때만이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때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사로 박제화 되지 않고 오늘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되살아난다.

02

한국에서의 국가폭력

국가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국가라는 주체가 행사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다. 국가가 직접 가해하지 않더라도 가해 상황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국가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엠네스티 보고서에서는 국가폭력의 주요한 형태로 불법 감금을 포함한 불법 형 집행, 불공정재판, 고문, 정치적 살인 등을 들고 있다. 국가폭력을 공권력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가시적·암묵적 가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독재정권하에서 자행된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지배세력은 민간인 희생 피해자들을 좌익 불순분자로 몰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깊은 한을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살아야만 했다.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은 너무 가혹하였다.

독재정권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경찰, 군대, 정보기관을 통해 고문, 간첩조작,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 체포, 연행, 감시 등을 자행하였다. 독재정권하의 국가폭력의 일상화는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저항 세력을 폭력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사고를 국민 일반에게 내면화 시켰다. 우리사회에서 국가폭력은 너무나 일상화되고, 관행화되었다.

국가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어 우리사회를 전도된 가치로 지배하였다. 그 후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의 심리가 망각의 사회화로 이어지면서 많은 역사적 희생이 반복하여 나타났다. 역사적 희생이란,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희생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역사적 희생에는 학살, 의문사, 연행, 폭행, 구속, 고문 등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 등의 상당한 후유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간접적인 역사적 희생은 감시, 연좌제, 가족해체 등이다. 이로 인해 심리적 긴장과 불안이 누적되어 다양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03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가기관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간 경험, 고문을 당한 경험, 체포되어 사건의 조작에 의해 수감된 경험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감시를 받았던 경험 등은 개인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 고통스러운 회상을 하고 반복적으로 악몽에 시달리며, 자기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과도하게 사람을 경계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정서적으로 위축된다. 또한 우울에 빠져 허무감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기 싫어하기도 한다. 그들이 겪는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에 1개월 이상 당시 상황을 재경험하고 회피와 정서적 마비, 과도한 각성 등의 심각한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트라우마는 외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전쟁, 학살, 고문, 폭행, 유괴, 범죄행위,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하다.

국가폭력 트라우마는 재난트라우마나 사고트라우마 등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절대적 보호자 역할을 하여야 하는 국가가 반국가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형 또는 처벌을 가했다. 둘째, 사건의 진상규명을 수십 년 동안 외면하고 사회적 낙인을 계속하여 공동체로부터 배척해 왔다. 셋째, 가해자가 사법처리는 고사하고 책임이 있다는 공식사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된 트라우마는 복잡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인 낙인과 배제를 동반한다. 국가가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데올로기적 낙인을 찍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곳곳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격리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반복적인 불이익과 차별 속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과각성, 분노폭발, 불안, 집중력 감소 등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정치적 학살 및 고문 같은 트라우마의 경우 가까운 친척 및 친구들을 잃었다는 상실감,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인간적 배신감,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다양한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와 같은 트라우마로 인해 그들은 직업을 갖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관계의 균열과 사회관계의 고립 등의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 왔다. 따라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와 재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04

트라우마의 치유

1987년 UN 고문방지협약 제 14조는 고문에 책임 있는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의 재화를 위한 치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고문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재화를 위한 어떤 치유방안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가가 고문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나 재화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12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재화를 위한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열었고, 그 후 그들을 위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치유공간이 몇 군데 생긴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모든 자는 그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개인의 개인사는 역사의 진행 논리와 유사하다. 개개인의 특수한 경험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고 바로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된다. 급격한 환경적 변화, 신체적·정신적 위해는 개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후의 삶에도 지장을 준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개인의 역사, 주변환경, 인간관계, 가해자, 국가폭력의 양태 같은 개별적인 맥락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는 개인에 맞는 개별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트라우마가 심각하여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대인관계 문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 재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치료뿐 아니라 공통의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여건상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만성화되어 2차적인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는 개별적인 맥락을 고려한 치유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개별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들이 겪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왜곡된다면 재트라우마를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치유이다. 개별적 치유와 사회적 치유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는 일반 치료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고문이나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전문 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05

치유공간으로서의 남영동

남영동 대공분실은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이 자행되었던 국가폭력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공간이기도 하다. 독재의 폭압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주의 발전을 상징하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장소성이 확보되었다. 국가폭력의 가해공간이 기억장소로 전환되고, 민주인권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남영동의 민주인권센터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민주인권센터가 보다 더 기능과 역할을 잘 하려면 고문생존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영동이 고문을 자행한 장소이고 그로 인해 고문생존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은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치유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상징성, 접근성, 환경 친화성, 사회적 합의성 그리고 자원 확보성의 입지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징성은 입지대상지의 국가폭력해석가능성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말한다. 접근성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성과 이용접근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접근성과 치유대상자가 대상지에 갖는 심리적 거리와 친근감을 나타내는 심리적 접근성을 말한다. 환경 친화성은 대상지 주변의 치유환경 친화성과 대상지 자체의 자연환경 친화성을 말한다. 사회적 합의성은 치유대상자의 규모와 설립취지에 대한 치유대상자와 지자체의 이해와 준비정도와 센터 설립 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가능성을 말한다. 자원 확보성은 대상지의 활용가능성, 지자체 자원제공가능성, 전문 인력 확보가능성 그리고 연계기관 이용 가능성을 말한다.

남영동은 상징성,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합의성 그리고 자원 확보성에서는 치유센터로서는 더 없이 적당한 장소이다. 특히 상징성은 어떤 장소보다도 뚜렷하게 우월하다. 환경 친화성은 앞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치유환경을 친화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심리적 접근성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고문을 받은 공간에서 치유를 받을 때 그 당시의 기억들이 떠올라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영동 민주인권센터가 역사적·교육적·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기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된다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된

치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남영동의 민주인권센터가 치유공간으로서 입지선정기준에 충족한다면 치유센터를 설립하는데 고려할 점이 있다.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서비스를 소화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논의이다.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경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을 정신 병리로 다루는 정신건강 의학적 접근에 편향되어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병리화하지 않고 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는 낙인화를 피할 수 있는 치유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센터는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남영동의 민주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에서 치유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여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바란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반성과 아픈 기억의 반추를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폭력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로 가해주체는 국가이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 재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하며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그리고 남영동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8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